

민주 선거모드... 시·도당 “공천협의체 구성”



“새해도 열심히 뛴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위원장 등 당원 400명 5·18 묘역 참배 조만간 실무 회의 개최...지역 맞춤형 공천물 관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공천물을 함께 정하는 공천협의체 구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중앙당에서 정한 공천물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공천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은 2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묘지를 함께 참배한 뒤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인 공천작업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이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지역 당원 400여 명과 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형석 시당위원장은 “시·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천 작업으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이 한밤에 수복되는 것에 대해 보수정당의 반발이 심하지만 올해는 수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지방선거 개

한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하나의 공동체다.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민주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바른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면서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형석 시당위원장과 이런 기구를 조속히 만들겠다”며 “공천 과정, 규칙, 실제 결과가 시도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 협력을 위한 실무 회의를 교환했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회의도 열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치솟아 입지자들이 몰

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이 지역 공천물을 만들어 혼란을 줄인다는 점에서 협의체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 이 협의체는 공천물과 공천배제 기준 등 중심이 되는 중앙당 공천물이 정해지면 권리당원의 투표 방법과 여론평가 방법 등 실무 차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예상돼 시·도당이 협의체를 만들어 객관적인 지역력을 만들어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기초틀이 정해지면 그를 토대로 시·도당이 공천 협력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다”면서 “시당과 도당의 지방선거 기획안이 꾸러지고 실무자 협의를 거치면 조만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 심사

국회 회기 종료에 불체포 특권 해제...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대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권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지방선거 인재 영입 올인

“2월까지 마무리”...홍준표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

지난달 전국 당원협의회 회의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새해 들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인 문제 등은 잠시 접어두고 지방선거에 몰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대표는 2일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밀바다까지 내려갔던 우리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방선거는 이길 거다. 이기는 공천을 하고 이기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재영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 가능한 오는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늦어도 3월말까지는 공천을 끝내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를 조기에 가동함으로써 선거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접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은 홍 대표가 다음주부터 전국을 돌며 인재영입에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각 시도 당협별로 신년인사회가 있으니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인재영입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도 한 분 한 분 협의하는 중이고 인재영입을 2월 전에 되는데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언제까지 영입을 끝내겠다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상은 상당 부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 해럴드 회장, 또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장재국 현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고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홍 대표가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는 홍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론은 압도적 찬성 개헌 국회는 평행선 대치

정부 형태·헌법 전문 내용·지방선거와 동시투표 등 쟁점

6월까지 2차 활동 성과 주목...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도

올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차 활동을 종료하고 2차 활동을 앞두고 있으나 개헌 시기·정부형태 등 여야의 입장 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는

전직 국회의장, 대학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49명으로 꾸려진 자문위도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자문위는 10월 말까지 최종적인 자문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원들 간의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달 말에야 자문안이 만들어졌다. 여야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논의는 2라운드에 접어들어 상황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정개혁위 위원은 25명이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개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헌 시기와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헌법전문에 6·10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충북형평 정신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개헌안 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정의당 지도부 오늘 광주 방문

5·18 참배 새해 첫 행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광주를 찾는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포(무묘역)를 차례로 찾아 헌화·분향하며 5일 영령과 민주열사의 넋을 기릴 계획이다. 정의당의 이번 행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강은미·한창민 부대표, 전남도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8,133백만원

-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 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재신청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채굴), 관광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지역(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은행(신규)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이정 체결가능 기업

○ 지원내용

용자구분	지 원 내 용
사업자금	계획사업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 (채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비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3. 지원조건

구 분	기간 (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사업자금	5년/5년	3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18분기)
운전자금	2년/3년	5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현재 1.75%

4. 우대지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
- 폐광지역 주민 또는 탄광이주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사업자금 융자비용을 소요자금의 100% 이내까지 우대 적용

5.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http://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향'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기업·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신청기간 : 2018. 1. 28(수) ~ 2018. 1. 31(수) (30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태백시청, 삼척시청, 정선군청, 영월군청, 보령시청, 문경시청, 화순군청) 담당부서

6. 기타사항

- ※ 신청서 제출 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uris.molit.go.kr)를 통해 해당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폐광지역진흥지구 해당여부 확인 필수
- 공고내용 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참조
-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18년도 소요자금에 한하며, 1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불용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